

민주연구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의 의미와 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3월 23일(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시행의 의미와 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가족, 이웃과 어울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 지역주도형 정책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문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부담, 지역 및 계층 간 돌봄 격차를 감안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민주당과 이재명정부가 추진해 온 통합돌봄 사업 과정을 정리하는 동시에,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통합돌봄사업 추진 경과,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향후 과제를 다루었다.
 - 첫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보건의료, 주거, 요양, 건강관리, 일상돌봄 등 개인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관리해 제공하는 정책으로, 돌봄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사회가 나누는 동시에 서비스의 통합운영으로 돌봄 격차와 사각지대는 줄이고 체감도는 높이면서, 재정적 부담 역시 완화해 지속가능한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 둘째, 해외에서는 이미 2, 30년전부터 통합돌봄을 구축해왔으며, 해외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1) 지방정부 중심의 권한과 역할 부여, (2) 재택 중심의 서비스 제공 (3) 통합적 자원구조 (4)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라는 특징이 있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통합돌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다.

- **셋째**, 대표적으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재가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 공적 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했으며,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토대 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 주거,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공식화했다.
 - **넷째**, 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윤석열정부에서 축소, 훼손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22대 국회 입법을 토대로 통합돌봄을 전면시행해 윤석열정부에서 후퇴한 통합돌봄 사업을 바로잡고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확대·계승하고자 했다.
 - **다섯째**, 이재명정부 통합돌봄사업은 ‘신청→조사 및 판정→개인별 계획 수립→필요 서비스 연계→사후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 역시 노인 및 심한 장애인에서 점차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명시해 돌봄기본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조직과 예산 역시 확대했다.
 - **여섯째**,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이용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면서, 개인과 가족,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일곱째**, 통합돌봄사업의 안착을 위한 향후과제로, 사업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떤 것이기에 통합돌봄 안착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통합돌봄위원회나 시도통합돌봄 지원단 등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협력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돌봄 노동자와 돌봄 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 역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돌봄기본법」, 「돌봄노동자법」 등 국회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돌봄기금 마련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관련 입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의료·돌봄분야 사회 연대경제조직의 활성화와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역시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 민주연구원 신영민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시행은 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해외에서도 20년 이상 시간을 들여 구축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인력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